

1. 분단국가의 출범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출범한 역사적인 날이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분명 의미 있는 날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당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동북아 주변부국가로 편입된 대한민국은 결코 영광스럽거나 평화롭고 축복된 상황에서 출발의 뜻을 올린 것이 아니었다. 1945년부터 3년간 정치·사회적 갈등과 투쟁, 피의 보복이라는 악순환의 연속선에서 대한민국은 시작된 것이었다. 1948년 8월의 시점에서 분단국으로서 남한은 38선을 경계로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로 굳어져갔고, 한반도 남단인 제주도에서는 '4·3항쟁'이라는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제1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정치적 지지기반도 매우 취약했다. 이승만은 5·10단독선거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에 선임됐다. 직선제가 아닌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5·10단독선거에는 좌익세력이나 중도좌파세력이 거의 불참했고 민족주의세력도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친일경력이 있는 지주세력, 지식인그룹, 경찰, 군부관료 출신들이 제헌의회 의원을 구성했다. 따라서 이승만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의 정치기반은 지주·토착산업자본가·보수적 언론인과 지식인을 주축으로 한 한민당, 일제시대 때 친일경력을 갖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관료집단,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좌익탄압에 선봉장 역할을 담당한 경찰조직이었다. 그리고 이범석이 이끄는 민족청년단·대동청년단·서북청년단 등 준군사적 성격을 띤 우익청년단체, 이승만을 추종하는 관료·친미지식인·농촌지주층을 중심으로 한 독립촉성국민회 등의 보수적이고 친일경력이 있는 정치사회단체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의 국가기구도 엄청나게 비대한 조직이었다. 경찰과 관료조직이 그 뼈대를 이루고 있었고, 정부는 남한 총재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귀속재산을 보유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경찰과 관료조직은 오히려 일제시대 때보다 해방 직후부터 대한민국이 출범할 때까지 더욱 팽창하였다. 이에 비해 토착산업자본가와 지주 등 사회의 상층지배계층은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 그들은 또한 부일협력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기에 정치적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한사회는 그물망처럼 전국을 감싸고 있는 국가조직이 관장했고, 국가조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생적으로 분출하는 민중적인 요구를 억누르는 데 역량을 집중시키는 비정상적인 기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승만의 정치적 취약성은 국가형성의 동반자인 한민당이 초대정부의 각료선임에 불만을 품어 양자사이의 갈등이 드러나자 더욱 심각해졌다. 또한 국회에서는 9월 7일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이 통과됨으로써 친일분자뿐만 아니라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내부의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바로 이승만의 권력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정치공세였다.

이어 10월 13일에는 김구를 추종하는 임시정부계와 무소속 혁신파의원 44명이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반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제1공화국의 권력기반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제1공화국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국방경비대와 경찰·관료조직, 중도 우익정당, 각종 사회단체, 학원가 등에는 아직까지 공산주의자들이 널리 뿌리박혀 있으면서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고 있었고 한반도의 남단인 제주도에서는 '4·3항쟁'이 진행 중이었다.

또 1946년 '가을항쟁'과 1948년 '단선단정 반대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바 있던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는 좌익동조세력이 널리 잠재해 있었으며, 산악지대에는 이른바 '게릴라 투쟁'을 준비하는 세력도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중들의 식량 및 생필품난 등 민생문제가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3년여 동안 최소 25배가 넘게 물가가 폭등하고 있었고, 일제식민지 경제구조의 한 부분이었던 한국경제는 일제가 패망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이 도산하는 등 마비상태에 가까웠다. 대량실업도 당연한 현상이었다.

1) 좌익의 집결지 국방경비대

대한민국의 군은 1945년 11월 국방사령부란 명칭으로 창설됐다. 1946년 6월 소련이 이 같은 이름에 이의를 제기하자 국내경비대와 국방경비대로 명칭이 재차 바뀌었다. 군은 초기에 일본군 출신과 광복군 출신이 혼합된 매우 이질적인 조직이었다. 미군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일본군 출신이 상위직을 독점하여 주도권을 장악했고, 광복군 출신들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군대의 하위조직은 이와 반대로 사회에서 정치투쟁을 벌이고 은신처를 찾던 좌익의 온상이 됐다.

해방 후 미군정이 국방경비대를 창설한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됐다. 해방 당시 일제 경찰조직은 거의 와해됐고 우익세력은 좌익에 비해 그 세력이 미미했다. 또 30여 개에 달하는 군사단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해 있었다.

미군정은 이에 따라 한편으로 경찰과 한민당 등을 보조해주고, 다른 한편으로 좌익적 성향을 띠는 군사단체를 불법화해 해체시킴으로써 우익조직에 인적 자원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로 군을 창설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경비대 확장에 적극적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미군정시기에는 아직 한반도의 분단이 최종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남한만이 국군의 모태로서 경비대를 창설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입장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군정은 단지 경찰력을 보조한다는 명분으로 경비대 창설과 확장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경비대 창설의 목적과 그 한계는 군의 하부조직의 구성과 군(軍)·경(警)관계에 기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했다.

국방경비대는 모병 초기인 1946년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9개 연대를 창설했다. 각 연대는 9개 도의 도청소재지별로 창설되어 향토경비대로 불리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펴낸 『한국전쟁사』 1권에 따르면 모병은 홍보활동, 가두모집, 행정관서의 협조 등으로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경비대는 경찰의 보조기관이며, 정식군대는 나중에 모집할 것”이라는 대중의 인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초창기의 부대편성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대 규모를 충원하기조차 어려웠으며 신탁통치정책에 대한 찬반대립, 입대 전 출신별 군사단체(국군준비대·광복군계·일본군계) 사이의 불신과 반목, 일본식 군내무생활·규율·훈련 등으로 탈영과 충원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사상적 성향과 관계없이 사설군사단체 출신자들이 주요 모병대상이었으며, 경찰의 추적을 받는 정치범과 일반 범죄자, 심지어는 깡패·부랑자들의 입대도 허락되었다.

미군정은 단독선거를 치르기 직전인 5월 초 6개 연대를 신설하고 2개 여단을 보강하는 정책을 펴며 따라 경비대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경비대는 여전히 내부적인 취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모병작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부족하였지만 그나마 덜 어려웠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단을 확정짓는 ‘5·10단독선거’를 전후해서 모병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찰예비대’로서가 아니고 ‘국군의 모체’로서 경비대를 선전할 수 있었으며, ‘단선단정 반대투쟁’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경찰의 지명수배자들이 거의 모두 입대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해외귀환동포나 월남동포가 대부분을 구성하는 대규모 실업자군의 발생과 춘공기의 식량부족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모병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1946년 ‘가을항쟁’, 1948년 ‘단선단정 반대투쟁’이 격렬하게 나타났던 지방에서 창설된 연대일수록 그 하부조직이 좌경화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남로당의 군침투 공작으로 더욱 촉진되었다.

여수에서 5월 4일 창설된 제14연대의 경우, 병사의 반 이상이 남로당 전남도당의 침투공작에 따라 입대했다는 것이 현대사연구가 김남식의 주장이다. 또한 낮은 대우, 사회적 신분의 수직적 상승기회의 결여,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불만이 누적된 사병들이 장교들의 명령에 불복하는 풍토까지 비일비재했다. 사병들은 장교들과는 반목한 반면, 지연으로 맺어져 있으면서 자신들의 군대생활을 직접 통제하는

인사계 등의 하사관들과 친밀하였기 때문에 하사관의 명령에 잘 따랐다. 따라서 장교와 사병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마찰의 소지가 많았으며, 이는 좌우익 등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 장교들의 부패 등으로 더욱 촉진되었다.

한편 좌익탄압의 선봉장을 자임했던 경찰은 친일성향의 집단이었으며 구성원의 출신도 복잡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비대를 '경찰의 예비대'쯤으로 인식했으며, 사상적으로 불순하고 향토적 색채를 띠는 '오합지졸'로 깔보는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반해 경비대는 무기·복장·급식 등에서 자신들보다 훨씬 월등한 경찰에 대한 반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과거에는 일제의 주구노릇을 하더니 이제는 자신들보다 높은 대우를 받으면서 경비대를 깔보는 데에 대한 모욕감마저 느끼는 분위기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47년 6월 3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대규모 군경충돌사건이다. 6월 1일 오전 7시 영암경찰서 신북지서에서, 외박나온 제4연대 소속 하사관이 신북지서장과 사소한 '모표(帽標)전쟁'을 벌여 구속되자 이를 수습코자 출동한 군기병 4명 가운데 1명이 경찰에게 심하게 구타되고 3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경비대의 제복은 일본군의 복장을 개조해 사용했으며, 계급장 표지는 경찰간부급의 계급장을 장교의 계급장으로(일제 경찰의 귀단추 무궁화표지) 부착해, 마치 경비대가 경찰의 하위조직인 양 인식되는 결과를 빚었다. 이 같은 복장과 계급장제도 때문에 경비대는 경찰의 우롱 대상이 되기도 했다.

여하튼 이 소식을 듣고 제4연대 사병들은 흥분했다. 약 300명의 사병들은 하사관들의 지휘 아래 6월 3일 새벽 2시경 신북지서를 습격했다. 여기에 장교까지 가세, 오전 3시경에는 신북·덕진지서를 습격해 점령하였다. 경비대 병력은 더 나아가 오전 4시경에는 영암경찰서를 포위, 경찰과 2시간여에 걸쳐 총격전까지 벌이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 군경무력충돌에서 경찰은 기관총으로, 경비대는 일제의 99식 소총으로 대응했으며 결과는 경비대의 참패로 끝났다.

이 사건은 제4연대와 광주의 기동경찰대의 무력충돌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였으나 미국인 경찰고문관, 제4연대 고문관, 영암군수 등이 중재하여 일단락됐다. 또 이 사건으로 경찰은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2명으로 비교적 피해가 경미했으나 경비대는 사망 6명, 중경상 10명 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이 같은 군경충돌은 비일비재했으며 군경관계는 악화일로로 걷고 있었다.

2) 남로당 조직의 한계

남로당은 1946년 8월경, 이전의 조선공산당이 해체되면서 박헌영의 주도 아래 설립된 좌익정당 조직이었다. 남로당은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를 통해 조선공산당 내부의 분열적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미군정의 우익편향적 정책에 대항한다는 전략적 목표 아래 태동하게 되었다.

남로당은 초기 형성과정에서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제약을 안고 출범하였다. 급진적인 조공의 박헌영과 온건노선의 인민당·신민당 일부 분파의 결합 즉, 지도그룹의 이질성을 첫번째로 들 수 있다. 또한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당조직이 과다하게 노출되어 경찰의 추적권에 놓여 있었다. 미군정에 합법적 정당으로 등록한 남로당은, 기본핵심조직은 전위정당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겉으로 대중정당의 형식을 취하였다.

이에 덧붙여 남로당은 10월항쟁으로 생긴 당전력의 손실을 만회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세확장까지 피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했고, 외곽정당에서 프락치로 활동했던 당원이나 과거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 민청원들까지 대거 남로당에 가입함에 따라 당 하부조직이 매우 이질적이고 복잡적으로 구성되었다. 이 같은 무리한 당세확장의 이면에는 김일성이 주도하는 북로당과의 당세경쟁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특히 1947년 4월 미

소공위가 재개될 때 남로당은 지역구 간부를 분할·확대하고 당원 5배가운동을 무리하게 전개함으로써 외형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당조직은 매우 취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로당은 1947년 7월 미소공위가 재결렬되자 단독정부 수립을 예상해 군부에 당원을 침투시키는 공작을 본격화했다. 경비대 침투공작은 1947년 말과 1948년 초 이른바 '인민혁명군사건'으로 폭로된 바 있다. 1948년 전반기 단선단정 반대투쟁 과정에서 많은 좌익 검거자가 생겨 경비대 침투공작은 활발해졌고, 5월 이후 6개 연대의 경비대가 창설되면서 절정에 다다랐다. 지역적으로는 단선단정 반대투쟁이 가장 치열하였던 전라도와 경상도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남로당의 군부침투공작은 미군정과 경찰에 날날이 파악되고 있었다. 미군정 보고서 1948년 3~4월자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의 공산주의자들은 국방경비대 침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경비대가 남한에서 권력탈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대구의 민주주의민족전선 부의장이 조선경비대에 입대했으며, 그의 다수가 침투해 있다.

남로당의 군부침투공작은 이원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원칙적으로 장교는 당 중앙군사부가, 사병은 지방당부가 담당했다. 당중앙이 장교를 담당한 것은 장교의 선발·교육·배치 등의 권한이 중앙사령부에 있고, 근무지 이동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남로당이 추천한 자를 경비사관학교에 무조건 입교시키고, 이미 임관된 장교는 동기동창·혈연·지연 등의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포섭하는 식이었다. 각도당이 사병을 담당한 것은 사병모집이 도단위로 행해지고 또 연대의 이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수 제14연대의 경우 남로당의 침투공작은 당시 전남도당 조직부과장이었던 박춘석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도당 군사부에서 광우·목포를 비롯한 각 시군당 군사령부에 사병추천 지시를 하달하면, 이들은 먼리까지 다시 지시를 하여 입대자 명단을 받아 도당 군사령부에 제출한다. 도당에서는 이 명단을 연대공작을 담당하는 오르그(도당에서 파견된 조직원)에게 준다. 이들 오르그는 연대 인사계(포섭된 자로 당시 지창수 상사)에 지시하여 대대, 중대, 소대로 배치한다. ... 여수 제14연대는 약 반수의 사병이 전남도당에 의해 침투되었다.

남로당의 군부침투공작은 사병조직과 장교조직 사이, 도당지도부와 장교조직 사이의 분절성을 안고 있었으며, 그 결과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군은 하부조직의 돌발적인 행동에 따라 쉽게 자극을 받아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었다.

1948년 2월 7일부터 3월 말까지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남로당이 주도한 전국적 규모의 '2·7구국투쟁'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선전·선동, 파업·파괴, 시위·맹휴, 그리고 경찰서·관공서 습격, 우익에 대한 테러 등을 통해 남한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이 과정에서 남로당은 대규모 검거, 전향자의 속출, 이에 따른 당조직의 노출과 파괴로 말미암아 5·10단선단정 저지투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조직의 수습과 강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남로당은 이제 조직확대나 군중적 조직확대를 지양하고 조직을 '핵심체 구성' 및 '전위조직 형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비합법적 태세와 규율강화를 강조하는 중앙집권식 하향조직체계로 전환하고 동시에 정상조직체계와 특수조직체계를 엄분하여 정당으로서 남로당 조직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중앙집권식 하향체계로 전환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서울 지도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그리고 남로당보다는 지방토착조직의 영향력이 큰 지역일수록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주 '4·3항쟁'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3월과 4월 시점에서 남로당은 비합법적 투쟁을 주로 하고 합법적 투쟁을 종으로 하는 이른바 '배합투쟁'으로 전환한 것이었지 전면적인 무장투쟁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단선단정 반대투쟁과

정에서 폭발한 '4·3항쟁'은 당시 남로당의 투쟁노선에 배치되는 모험주의적 경향의 표출로서 중앙에서 계획되고 통제되지 않은 일종의 돌출물이었다.

단선단정 저지투쟁 과정에서 변형된 남로당은 남북에 적대적인 두 개의 분단국가가 출범하면서 다시 한 번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남북노동당은 1948년 8월 25일 '남북노동당 연합중앙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것은 남북노동당의 완전한 합당체가 아닌 당의 하부조직은 그대로 두고 중앙만 결합하여 남북의 모든 문제를 토의하는 과도기 형태였다.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연합중앙회의 설립으로 남로당의 서울중앙위원회는 서울지도부로 바뀌어 단순한 정책수행기구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남북에 적대적인 두 개의 분단국가가 형성된 시점에서 남로당의 활동은 그 이전보다 훨씬 제약되었다. 먼저 남로당은 독자적인 중앙위원회의 상실로 북로당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정책수행에서도 38선 이북 연합중앙회의 지시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한 투쟁을 전개할 수 없었다. 셋째로 이전보다 훨씬 적대적이고 열악한 조건에서 더욱 힘든 투쟁, 즉 북한공산정권의 정통성 선전(8월 지하선거와 인공기 계양투쟁), 중도우익과 정치적 연합모색(미군철수 공작과 정당·사회단체에 대한 프락치 공작), 남한정권의 전복을 위한 무장력 확보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했다. 분단국가가 성립된 후 남로당은 상부조직의 정책수립과 수행의 혼선, 지방 하부조직에서 말단조직의 이탈, 경비대를 대상으로 한 무절제한 프락치 공작, 경비대에서 남로당 조직의 분절성 심화와 함께 지방조직의 모험주의적 경향을 감수해야 했다. 어떤 면에선 독자적인 힘으로 정권을 탈취할 수 있는 자생력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경제구조의 파탄

해방 후 남한의 경제는 줄곧 구조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위기는 1948년 중반 이후 절정에 도달했으며, 달리 표현하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 3년간의 통치는 정치적으로 좌우익의 갈등이 폭력적·무력적 수준으로 발전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경제는 정치 불안정에 따른 혼란으로 파산의 늪에 빠졌다. 최소한 남한만이라도 친미적인 자본주의정권을 수립하려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1948년 가을의 시점에서 일단 성공할 수 있었지만, 우리 한민족은 '죽음과 고통'이라는 형태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자기완결적인 경제체제를 갖지 못한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는 일제의 패망으로 일본, 한반도, 만주공업지대로 이어지는 경제구조에서 분리되면서 분업연계구조가 단절돼 경제적으로 적잖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또 대다수를 차지했던 일제기술자들의 본국귀환, 패망 직전의 통화남발, 미소의 분할점령으로 야기된 분단의 고착화 등은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산업구조가 편중되어 분포된 남북한의 경제파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또한 300만에 달하는 귀환동포, 수백 만에 달하는 월남동포의 유입, 물자부족에 따른 매판자본가들의 매점매석, 누적된 미군정의 재정적자와 통화팽창, 북한의 단건 등으로 1948년 가을 여순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민중들은, 혁명이 진행 중인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상승·실업난·식량문제 등의 민생고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물가상승률은 가히 살인적이었다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른다. 1945년 8월 해방 이후 1948년 1월 현재 만 2년 5개월 동안 서울의 생필품 가격은 평균 252배나 폭등했다. 직물값은 무려 542배나 올랐고, 곡물가는 11.6배에 달했다. 곡물가의 상승률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미군정의 미곡수집정책과 저곡가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 인구의 70~80%에 달했던 대다수 농민들은 기아에 허덕이면서도 강제공출을 당해야 했고, 그나마 곡물을 시장에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했다. 당시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매우 힘들어 높은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급격한 실질임금 하락도 감수해야 했다. 일제시대 말기에는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해방 후 3년이 채 못 되어 실질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

률의 5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있었다.

1936년 일제시대에 100원 이상의 봉급생활자, 고등관 이상의 관리, 기업체의 과장급 이상 고급기술자 등 당시 사회의 상층계층은 1948년 1월 1만 8,000여 원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임금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생계를 겨우 꾸려갈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는데, 실제로는 5,000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빚을 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부패 등을 통해 가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사회 최상층 계층의 생활이 이럴 때 대다수 민중들의 생계가 어떠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봉급생활자는 그나마 혜택을 받은 계층이었는데도 집안의 귀중품이나 가구 등의 살림도구를 팔아서 가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1947년 11월 당시 미군정청 통계에 따르면 남한의 공장조업률은 최저 4%에서 최고 40% 정도였다. 농촌을 빼고 도시의 민중들은 거의 실업상태에 있었다는 표현이 옳을지 모른다. 당시 서울의 가옥 중 80% 정도가 금융기관에 저당잡혀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비일비재했다.

해방 이후 80% 정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남한사회에서 서울 등 도회지의 민생고는 오히려 부차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의 농민들은 미군정의 미곡수집정책과 저곡가정책,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자생조직들이 경찰과 우익에게 파괴됨으로써 때로는 피와 죽음이라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기아와 폭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대부분의 지방에서 그들의 저항은 1948년 전반기까지 계속됐지만 자신들의 결사체가 파괴되고 그 대신 경찰력과 행정력, 우익단체의 힘이 강화됨으로써 점차 그 힘과 규모는 쇠퇴해갔고, 이에 비례해서 그들의 생계조건은 더욱 악화됐다.

1946년 가을항쟁, 1948년 단선단정 반대투쟁에서 ‘쌀을 다오, 공출반대’ 등의 구호가 꼭 나타났고 습격대상도 쌀창고, 미곡공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찰·관리·지주였다. 이 점을 감안해볼 때 농민들은 이데올로기보다는 자신들이 피땀 흘려 생산하면서도 굶주려야 했던 ‘쌀’을 위해 투쟁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미군정의 미곡수집정책은 1946년 10월경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곡수집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소작료인 미곡을 전량 공출하도록 규정하고, 수집량은 지주·소작인 등의 자주적 신고에 근거해서 구·읍·면장 등 주로 지주와 친분이 두터운 지방의 말단관리에게 할당을 맡겼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작농이나 빈농에게 매우 불리했으며 실제 할당과 수집에서 친분관계, 정치적 고려 등의 여지가 많았다. 미곡수집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경찰과 관리가 강제로 실시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과정에서 평소 감정이 있거나, 무상몰수의 혁신적인 토지개혁을 주장하고 미곡공출을 반대하는 좌익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는 대개 미곡수집량을 부당하게 할당받고, 배급은 조금밖에 받지 못했다. 경찰과 관리들은 부여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농가의 가축과 재산을 몰수해서 차액을 메우기도 했다.

1948년 미곡수집연도(1947년 10월부터 이듬해 봄까지)에 미군정은 97.1%라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1948년도는 미곡수집이 절정에 이른 해였으며 미군정은 전년에 비해 144만 섬 증가한 500만 섬을 거두었는데, 이는 전체 생산량의 36.1%에 달하는 양이었다. 당시 농민들은 시가의 10분의 1 정도를 받고 미군정에 쌀을 팔아야 했다. 이에 따라 1948년 봄 춘궁기에는 심각한 식량문제가 야기되었다. 1948년 3월 춘궁기에 절량농가는 최소한 40%에 달하고 있었다. 이들 농가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에게 고율로 쌀을 빌리거나 고율의 사채를 얻거나 아니면 가축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고 그렇지 않으면 들이나 산에서 식량채집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식량문제가 심각하고 좌익세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항의시위를 하거나 쌀창고를 습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당시 『서울신문』은 “전남 영암에서 3월 이후 6월까지 기아군중이 식량창고를 습격하여 수집미를 탈취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정은 우익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5·10단독선거를 앞둔 1948년 3월 춘궁기에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귀속농지의 불하를 실시해서 8월 15일까지 신한공사 소유전답의 85%를 불하함으로써 소작농의 자작농화를 촉진시켰다. 이는 해당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장기적 효과를 가져왔

는지는 몰라도 단기적 측면에서는 농민들에게 적잖은 경제 부담을 가중시켰다. 왜냐하면 농민은 매년 연생산고의 2할을 15년간 현물로 납입해야 하며 이전과 달리 지세, 수리세, 농지수선비, 기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함에 따라 거의 2분의 1에 가까운 생산물을 세금과 토지불하금으로 내야 했다. 더구나 미군정은 지세와 지방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하여 신한공사의 토지가 밀집되어 있는 전남과 전북의 농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한편 전남의 농민은, 수확량이 전년보다 4할이나 감소한 상태에서 전년보다 3만 5,000석이 증가한 19만 8,000석의 하곡(보리) 수집배당량을 배당받았다. 설상가상으로 6월부터 7월 말까지 연이은 태풍과 장마로 전남지역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생고'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